

## 법무매거진



# ‘로톡 징계’ 고민 깊어지는 법무부... 8시간 심의에도 또 결론 못냈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열린 징계심의위에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한, 정재기 변협 부회장, 이은성 정책이사〉

법무부가 변호사 검색 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치가 정당한지 8시간 넘게 심의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7월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회의엔 로톡 운영사로앤컴퍼니와 변협 관계자들, 징계 받은 변호

사 11명이 출석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이날 변호사법상 사건 수임이 법률 상담을 포함하는 개념인지 등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 양측에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같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에 걸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월~올해 6월 징계 변호사 과태료 평균(251.4만원)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지난해 말 해당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한 차례 심의 기간을 연장해 지난 6월까지 내부 심의를 진행했고, 7월엔 로톡과 변협 관계자들을 불러 한 차례 입장을 청취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열린 징계심의위에 출석하고 있다〉

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에 관해 충실히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 1. 변협 “1년 반 1800건 수입…제대로 했을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동안, 변협과 로톡은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정재기 변협 부회장은 회의에 출석하면서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된 사건 중에 평균보다 많은 사건을 수입한 변호사 중 상위 30%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수입한 것이 확인

됐는데, 1년 반 동안 1800여 건을 수입한 변호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연 그 변호사가 1800여 건의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 줄여야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날이 계속되지 않게 법무부가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 2. 로톡 “법률서비스 접근성 증대…징계 취소돼야”

변협 징계를 받고 이날 회의에 직접 출석한 강문혁 변호사는 ‘민간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국민들의 권익 향상이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변협의 이번 징계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변호사는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오로지 변협이 출시하고 담당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라고 했다.

1급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탄 채 징계위에 참석한 이성준 변호사는 “정도(正道)를 지켜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로톡을 이용하는 것이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친다거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친다고 한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로톡 같은 플랫폼이 더 많이 생겨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 3. 변협, 8년째 ‘로톡과의 전쟁’

변협의 ‘로톡과의 전쟁’은 8년째 진행 중이다. 지역수호변호사단은 2015년부터 “로톡이 사실상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고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세 차례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김영훈 현 변협 회장은 지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 출신이다. 또 변호사들의 플랫폼 가입을 차단한 변협 광고규정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회원들에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각 10억원을 부과했다. 변협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출처/중앙일보)